

광주전남 통합단체 명칭·청사 위치 '평행선'

빅딜론·약칭론 등 의견 제시…결론은 못 내
민주 통합특위, 25일 재논의…특별법 내용도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통합광역단체의 명칭과 주 청사 소재지를 놓고 시도와 국회의원들이 오는 25일 논의하기로 해 주목된다.

22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시도 조간 간담회에서 통합 과정의 핵심 쟁점인 명칭과 청사 소재지 문제를 두고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간담회에서는 양부남(광주시당위원장) 특위 공동위원장이 제안한 이른바 명칭·청사 '빅딜론'을 두고 찬반 의견이 오갔다.

양 위원장은 "만약 '광주전남특별시'로 명칭을 정한다면 특별시 소재지를 전남에 두고, '전남광주특별시'로 갈 경우에는 소

재지를 광주에 두는 방안을 검토해 보자"

고 제안했고, 김원이(전남도당위원장) 공

자들 사이에서는 빅딜 방식 자체에 대한 반대 의견부터, 명칭과 청사 문제를 분리해 각각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다양한 견해가 제시됐다.

참석자 중 한 명이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하되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병기하자"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민주당 통합특위와 시도는 오는 25일 명칭과 청사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양 위원장은 "명칭과 청사 문제를 놓고 의견이 분분해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특별법 발의 시기를 고려하면 25일에는 명칭 쟁점 등을 일정 부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원이 위원장도 "약칭론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됐을 뿐 확정된 방안은 아니니"며 "25일 결론을 내겠다는 것도 '그렇게 하고 싶다'는 의지의 표현일 뿐, 논의를 더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통합특위와 시도는 오는 25일 오후 4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추가 간담회를 열고, 다음 주 밤의 목표로 특별법 수정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4년간 최대 20조 원 자원 방안을 반영해 추가 재정 특례를 어느 수준까지 담을지 등 구체적인 특별법 내용을 살펴 뒤, 명칭과 청사 위치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양동민·이현규 기자 yang00@

김영록 지사 "국립의대 정원 100명 배정 환영"

"도민 생명·안전 골든타임 확보" 강조…2028년 개교 요청도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보건복지부 보
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외대 없는 전남의
전남 통합대학교 국립의대 정원 100명
배정이 심의된 것과 관련, 환영의 뜻을
밝히며 도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2028
년 개교를 요청했다.

김영록 지사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은 섬과 산간 지역이 많아
의료 접근성이 취약하고 고령 인구 비중
이 높지만, 의료 인프라 부족해 도민
이 응급·중증 상황에서도 제때 진료받
지 못하고 타지역을 전전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남 통합대학교 국립의대가
전남에서 의사를 육성해 정착시키고 응
점은 전남의 현실을 고려하면 너무 늦
다"며 "전남은 섬과 산간 지역이 많아
의료 접근성이 취약하고 고령 인구 비중
이 높지만, 의료 인프라 부족해 도민
이 응급·중증 상황에서도 제때 진료받
지 못하고 타지역을 전전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남 통합대학교 국립의대가

전남에서 의사를 육성해 정착시키고 응

급·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해 도민이 의
지할 의료 기반을 갖추는 핵심 해법이
자.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대, 충족한
권역 책임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중심축
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록 지사는 또 "더 이상 기다릴 여
유가 없는 전남의 의료 현장을 감안해
전남 통합대학교 국립의대 개교 시점을
2028년으로 앞당겨 달라"고 요청하며
"앞으로 국립복합·국립순환대와 긴
밀히 협력해 2028년 개교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
다. 박경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22일 광주 서구 서빛마루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광주전남통합 서구권역 시민공청회에 참석한 강기정 광주시장과 양부남 국회의원,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 속도
추진협의체 제4차 회의 개최

광주시는 행정통합 추진 민관 합동 실무기구인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협의체 4차 회의'를 22일 시청 종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정통합 추진협의체'는 광주시와 전남도·시·도의회, 기초자치단체, 시·군·구의회, 경제·사회단체, 교육·문화계 대표 등 각계 인사 2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는 지난 12일 협의체 출범과 함께 첫 회의를 개최한 이후 두 차례 온라인 회의에 이은 네 번째 회의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회의의 결과를 공유하고,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포함될 특례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별법안에는 재정분권 특례, 지역개발 특례, 인공지능·반도체·모빌리티 산업 육성, 첨단전략산업 지원,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특례 등이 담겼다.

도 행정통합에 대한 시도민 이해와 공감대 확산을 위한 흥보 추진 현황도 점검했다. 협의체 위원들은 행정통합의 제도적 기반이 될 특별법의 실현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각계 분야 대표로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특별법안은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속도적으로 수정·보완 중이다.

지난 15일과 21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시도지사-국회의원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과 함께 특별법안을 통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양동민 기자 yang00@

시의회, 행정통합 특별법 내 자치권 강화 '총력'

국회의원·정개특위·행안위 등에 의원 정수 확대 건의

광주시의회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의 완성을 높이고 지역민의 목소리를 입법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국회와의 소통을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22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5일과 21일 국회를 잇따라 방문해 지역 국회 의원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에게 시의회가 마련한 특별법 검토안을 전달했다.

그간 광주시의회는 행정통합 대응 TF를 출범, 5차례 회의를 통해 특별법안 중 '자치권 강화'와 '지방의회' 관련 조문을

‘청렴·공정으로 군민주인시대 열겠다’

김태성, 신안군수 출마 선언

고향 신안에 대한 책임과 사랑에서 비롯된 결단"이라며 "군민이 주인이 되는 군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신안 지역에서 제기돼온

권력 구조 왜곡과 행정·선거 전반의 공정

성 논란을 언급하며 "군정이 소수의 이익

에 치우쳐서는 안 되고, 과거의 방식에 머

물러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

민복권 제도 운용 논란과 기득권 중심의

정치 구조, 장기간 누적된 정치적 갈등이

등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활동을 펼쳤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및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개별적으로 찾아가 시의회의 입장이 담긴 자료를 직접 설명하고 법안 심사 과정에서의 적극적인 반영을 견의하는 등 입법 반영을 위한 전방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수정 의원은 "행정통합은 단순히 행정 구역을 합치는 것을 넘어 자치분권의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과정"이라며 "시의회는 앞으로도 집행부,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시·도민의 뜻이 담긴 성공적인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

군민 사회의 분열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조합 운영의 토명성 문제 △기본소득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설명 부족 △신재생에너

지 사업의 주민 참여·협·협 미흡 △인사와

각종 사업 추진 과정의 공정성 논란 △'유

령 당원' 문제 처리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논란 등을 거론하며 "무너진 군민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임택 동구청장, 인문도시 정책 공유

24일 전남여고 체육관서 출판기념회 개최

임택 광주 동구청장은 오는 24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전남여고 체육관(예지관)에서 사람 중심 인문도시 정책 추진 경험을 담은 저서 '인문도시의 여정'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해당 저서는 민선 7·8기 동안 광주가 추진해 온 인문도시 정책의 출발과 방향, 주요 사업과 성과, 향후 과제를 한 권에 정리한 기록물이다. 단순한 인문학 이론서가 아닌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인문도시'를 행정 전분야의 비전으로 삼아 정책화하는 과정에서 구정장으로

서울에서 개최된다. 현장 경험을 생생히 담아냈다. 임 청장은 이번 출판기념회를 통해 '인문도시 광주 동구'가 걸어온 발자취를 주민과 공유하고, 향후 인문

도시 정책의 방향과 비전을 함께 모색하

는 소통의 장으로 꾸려나갈 계획이다. 행사는 별도의 기념식 없이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책 전시회, 저자와의 만남, 기념 활동과 함께 나누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송승종 북구청장 출마예정자, 출판기념회

24일 동신고 강당서…북구 미래 발전방향 제시

광주 북구청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송승종 더불어민주당 행정위원회 부의장은 오는 24일 동신고등학교 체육관에서 공직 생활 30여년의 경험과 북구 발전 비전을 담은 저서 '사람 속에서 길을 찾다'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저서는 광주시청을 비롯한 지방행정기관과 정부 공공기관에서 평생을 보낸 전문 행정가로서의 여정을 바탕으로, 주민과 현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온 행정 경험을 담아냈다. 민원 현장에서의 작은 변화와 실천이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진솔하게 풀어냈다.

책 제목인 '사람 속에서 길을 찾다'에는 주민과의 소통을 행정의 출발점으로 삼아 온 솔직미정자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겼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사람 중심의 행정을 구현해 온 그의 문제 해결 방식과 진정성을 평가했다.

행사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적극 지원해 온 이원종 배우가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할 계획이다.

가치관이 책 전반에 녹아 있다.

책은 총 7부로 구성해 1부 비전, 2부 뿌리, 3부 성장, 4부 청렴, 5부 사람, 6부 변화, 7부 성찰로 이어진다. 책머리에는 북구의 미래 방향과 발전 구상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오

제일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장과 임우진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추천사를 통해 저자의 행정 철학과 공직자로서의 진정성을 평가했다.

행사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적극 지원해 온 이원종 배우가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할 계획이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서동욱 도의원, 24일 자전 에세이 출간

'시민이 주인이 되는 도시 순천' 철학 담아

순천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서동욱 전 전남도의회 의장이 오는 24일 오후 2시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2층 공연장에서 자전 에세이 '서동욱의 진실' 출판기념회를 연다.

'서동욱의 진실'은 순천에서 태어나 지역을 떠나지 않고 살아온 한 정치인의 50년 삶을 따라가며, '시민이 주인이 되는 도시 순천'에 대한 정치 철학과 비전을 담아낸 자전적 기록이다. 개인의 성장과 지역의 역사, 한국 현대사의 굴곡이 맞물리며 서술된다.

책에는 철도관사 마을에서 보낸 유년 시절과 교육도시 순천에서의 기억, 가족 사와 일상 경험이 담겼다. 고교 시절 부정 시험 사건을 통해 저를 마주한 사회의 부조리, 1987년 6월 항쟁 현장에서의 체험

등은 정치에 끼친 끊임없는 계기로 소개된다.

특히 여수·순천 10·19사건에 대한 문제의식을 정치인생의 중요한 과정으로 삼아온 과정과, 시의원·도의원·전남도의회 의장에 이르기까지 20여 년의 정치 여정을 통해 형성된 '약속을 지키는 정직', '시민의 목소리를 제도로 만드는 정직'라는 일관된 철학이 책 전반을 관통한다.

출판기념회는 집필 배경과 핵심 메시지를 시민들과 직접 나누는 자리로 마련된다. 이현규 기자 gnnews1@